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5월

홈페이지, 이용자 편리성에 초점 맞춰 전면 개편

연구자료 이용 편리성 강화, 쌍방향 교류 영역 확대, 농업통계정보 신설



6월 1일 새로 문을 여는 연구원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krei.re.kr)와 영문 홈페이지(krei.re.kr/eng/),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aglook.krei.re.kr)를 전면 개편해 6월 1일 문을 연다.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는 최신 검색 엔진을 도입해 원하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메뉴체계도 개선하여 수요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메뉴체계 이용 편리하게 개선

컨설팅 결과와 홈페이지 방문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쌍방향 교류 영역을 확대하였다. 분산되어 있던 통계자료를 한데 모으고 활용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가공해 농업통계정보 콘텐츠를 신설하는 등 고객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영문 홈페이지는 외국에서 연구원의 연

구자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였다.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이용자 편의에 맞게 메뉴를 재구성 하는 등 전면 개편하였다.

디자인, 도농상생 개념 도입해

홈페이지 개편에는 연구원의 특성을 살려 연구자료의 이용자 편리성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연구자료 스크랩’, ‘추천메일’, ‘저자문의’ 등의 기능과 저시력 노령 농업인을 위해 글씨크기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책(E-book)보기’ 등의 기능도 추가하였다.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은 도농상생 개념을 도입해 새롭게 디자인 했고, 서브 페이지도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일신했다. ‘검색기능’과 ‘최신연구동향’ 코너를 홈페이지 중앙에 배치해 연구원의 중심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객센터’와 ‘한 눈에 보는 추천서비스 코너’도 메인화면에 구성해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였다.

이용자 중심으로 지속적 개편

새로 구축한 연구원 홈페이지는 올 1월 5일 사업에 착수하여 컨설팅을 한 달여 실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구축작업에 들어가 6월 1일 문을 열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한 홈페이지는 연구원의 온라인 인지도 증대 및 보유 콘텐츠의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홈페이지 설계와 농업·농촌 지식 채널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비중을 뒤 작업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다.

연구원은 앞으로 홈페이지 회원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원은 홈페이지 새단장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에콰도르 고급 공무원 농촌개발 연수

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과 공동으로 남미 에콰도르의 고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연수를 5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연수에는 에콰도르의 도지사, 시장과 군수, 고급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과 농촌의 발전, 농산업의 발전,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추진 전략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에콰도르의 농업 및 농촌개발에 적용할 부분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품목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수급 전망 논의 과채 · 과일 · 쌀 · 축산 중앙자문회의 개최



쌀관측 중앙자문회의를 5월 7일 갖고 쌀관측 봄호를 발간했다.

농업관측정보센터 과채관측팀과 과일관측팀은 5월 4일 중회의실에서, 쌀관측팀은 5월 7일 대회의실에서, 축산관측팀은 5월 21일 중회의실에서 각각 중앙자문회의를 가졌다.

5월 4일 열린 과채관측 중앙자문회의에는 성주참외원협 김은식 조합장, 송재선 송도농산물 대표, 서장우 농림부 통계기획과장, 이종만 농협중앙회 채소수급단장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과 김명환 농업관측정보센터장, 최병옥 과채관측팀장과 품목담당자가 참석했다.

중앙자문회의에는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격, 수급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풋고추 가격은 향후 현재보다 낮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참외는 강보합세를, 호박은 현재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일관측 중앙자문회의에는 윤익로 과수농협연합회장, 신현관 농림부 과수화훼과장, 박승수 한국청과 본부장 등 자문위원 13명과 관측센터장, 김경필 과일관측팀장, 품목 담당자가 참석했다.

자문회의에서는 주요 과일에 대한 재배면적과 수급동향,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사과와 만생종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저장사과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일관측팀은 이번 회의 결과를 월보에 반영해 5월 10일자로 관측월보를 발간했다.

쌀관측 중앙자문회의에는 전택봉 미국

종합처리장(RPC)협의회장,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범락 한국양곡가공협회장, 통계청, 농림부, 농협 등의 자문위원 14명과 관측센터장, 김태훈 쌀관측팀장과 팀원들이 참석했다.

자문회의에서는 쌀 가격 동향, 산지유통업체 재고 동향, 향후 쌀 수급의 변화와 가격전망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쌀 소비, 수입, 2007년 재배의향면적, 국제수급 및 가격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이날 논의한 것을 쌀관측 봄호에 반영해 발간했다.

축산관측팀은 5월 21일 중회의실에

서 한옥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로 나눠 중앙자문회의를 갖고 관측월보에 반영했다.

양돈산업 발전 위한 현장 간담회

연구원은 5월 18일 도드람양돈조합을 방문하여 양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서 연구원의 정민국 연구위원은 '양돈 소득 변동 실태와 과제'란 제목으로, 도드람양돈조합 김운경 전무는 '도드람양돈조합의 운영 및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중심의 양돈산업에서 벗어나 생산, 가공, 유통 등 포괄적인 돈육산업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고, 양돈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다.

토론 후에 양 기관은 체육행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워크숍에는 최정섭 원장을 비롯, 연구원의 축산관련 연구자들과 축산관측팀장, 관측팀원 등 15명이 도드람양돈조합은 진길부 조합장을 비롯 1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을 계기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원과 도드람양돈조합은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연구자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열기 후끈”



연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5월에 집중하여 가졌다.

연구원은 올해 연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연구자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5월에 집중하여 실시하였다.

‘의사결정리스크관리’ 교육을 5월 8일에 이어 5월 15일 두 차례 실시, 35명의 연

구자가 참여해 열린 분위기 속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의사결정리스크관리와 해결실습교육을 병행한 이번 교육이 농가경영과 영농법인 관련 연구자를 포함해 많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연구원은 또 5월 17일 프로젝트관리와 변화관

리 등 2개의 특강을 비롯해 5월 22일부터 이틀간 농촌과 지역개발 연구자들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교육을 실시하는 등 4개 과정에 30시간의 교육을 진행해 연구 품질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 협상과 농업부문의 주요 쟁점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와 EU 간에 FTA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협상을 닷새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려 5월 11일 마쳤다. 양측은 전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금액과 품목 수 기준 모두 95% 이상으로 하되, 공산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상품 분야 양허안을 6월 말경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향후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1차 협상 통해 기본틀 마련

한국과 EU는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신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첫 협상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 7월에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2차 협상부터는 FTA 체결을 위한 모든 의제에 관한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협상은 협상 타결 직전까지 물밑 작전과 기싸움으로 투쟁적인 대결 구도를 팽팽하게 유지하며 국제통상 협상의 살벌한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반면에 이번 협상은 초반부터 비교적 평온하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유지했는데 이유는 바로 농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EU는 농산물 관세와 농업보조금 등 취약점으로 인해 '예외없는 자유화'를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했던 미국과의 협상과는 달리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협상 관계자들은 "매우 성공적인 협상이며, 협상 담당자간에 상당 수준의 신뢰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면서 연말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3.7%인 미국보다 높아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의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언론들도 국내 총생산(GDP)이 연간 2.0~3.1%에 해당하는 16~24조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도하는 등 온통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그러나 시장 확대에 따른 이익 극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FTA의 본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리 우호적인 분위기라 해도 결국 자국의 이해가 걸린 부분에서는 힘겨루기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라 협상 기간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반의 순조로운 분위기에 현혹되어 성급하게 협상 결과를 낙관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관세 장벽 철폐에 관심 높아

협상에서 나타난 EU의 전략과 입장을 분석한 결과 EU는 관세 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 철폐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 문제, 특히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강력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생 및 검역(SPS) 조치 등을 포함한 각종 기술장벽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력 수출품인 가공식품류에 대한 관세 철폐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미국과의 협상에 못지 않은 수준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측은 관세 철폐 기간 등 구체적인 양허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양허 제외와 관세 철폐 기간 장기화 또는 관세 부분 인하, 그리고 저율의 관세할당(TRQ) 부여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EU측은 관세 철폐 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식으로 단순화자는 입장인 것으

로 알려졌다. 당장은 민감성 때문에 관세를 유지하더라도 점차 인하여 장기적으로 관세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공농산물 관세 철폐 요구 예상

농업부문에서도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 예외 인정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논리를 보완하는 한편 EU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분야별 쟁점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곡물과 육류 등 식품 안보에 관련된 기본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급률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무역자유화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그 밖의 가공농산물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교역 확대를 추구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EU는 민감품목에 대해 신속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우리나라의 설명에 공감하는 한편, 와인과 위스키, 치즈와 버터 등 낙농품, 돼지고기, 닭고기, 맥아, 올리브유 등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적재산권과 SPS 분야에 대한 EU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종자류에 대한 로열티 문제와 주류 관련 지리적 표시제 등에 대해 EU측이 향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돼지고기 가공공정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엄격한 위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WTO 차원에서 합의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조치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동시에 한·미 FTA 타결 내용을 참고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R**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방향

이 규 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최근 농림분야 과학기술은 과거 10년과 달리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도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연구개발형태도 품종 관리, 사양기술, 단순가공기술을 넘어 대형화, 복합·융합화하고 있다.

농림기술개발사업 농림 R&D 발전에 기여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정부·민간·학계 등 연구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대학 등 민간의 연구역량을 확충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은 2005년 기준 2,832과제를 지원해 1,364과제가 기술이전, 농업인 지도교육 등으로 활용되었고, 특허출원 1,644건, 고용창출 9,131명 등 산업·학술적으로 농림 R&D 발전에 기여해 왔다.

생명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농업이 부각되면서 생명공학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장개방의 파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농산물과 질적, 기능적 차원에서 차별화된 친환경·고품질·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출해야 한다.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했다.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초 기반기술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나 품목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해야만 했다.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는 2007년부터 농림부문의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실용화·산업화 위주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농림기술개발사업을 개편하였으며, 연구사업단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사업의 목적인 농업의 미래 유망성 및 성장가능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성과검증에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산업화 위주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 동력원으로 하는 농림생명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농산업체 및 농업인 단체 등 민간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일류의 고부가가치 농림산물·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 우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

실용화·산업화 중심의 연구개발체계 구축

셋째, 산업체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산업화·실용화 지향적 기술개발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 및 성과활용 관리를 강화하여 세계 일류의 고품질·고부가가치 농림산물·식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10년 동안 유지했던 11개 분야 기술분류를 기능 및 수요자 중심의 4개 분류체제로 기술개발체계를 개편하였다. 4개 기술분야는 ①고부가가치 안전 농산물 생산 및 품종개발·종자산업화 기술의 고품질·친환경·고기능성, ② 바이오자원(동물·식물·미생물 유래 신물질·신소재, Bio-Mass 등)을 이용한 산업화 기술의 생물자원·생명공학, ③ 비료, 사료, 기계, 자재, 시설장비 등 연관 산업화 기술의 농림기자재, ④ 식품가공, 제품화, 포장·저장, 물류 등 연관 산업화 기술의 농식품 가공·유통 분야이다.

다섯째, 분자농업·분자육종·전자식별(RFID) 등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의 생산·유통 및 품종개발 기술과 천연생물자원, 농림첨단융합 등 중점 투자분야를 발굴하여 미래 성장분야에 대한 연구투

자를 강화하고 있다. 여섯째, 농림기술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R&D기획기능 강화, 기술이전·산업화촉진 성과관리 등 관리의 전문성 강화)하여 농림분야의 명실상부한 연구전문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술수요자 중심의 성과활용 체계 구축

일곱째, 미래유망기술과 농정수행필요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수요조사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획과제 발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발기술 수준에 맞는 최적의 연구수행팀을 탐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개방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덟째, 농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농촌진흥청, 산림청, 타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와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제도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용화·산업화 등 연구성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과 목표관리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세부사업의 필요조건인 성과목표를 측정할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인 과제별 성공지표를 설정하였다. 즉, 사전연구 기획 단계부터 연구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목표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의 '기술개발→기술이전→기술실용화' 방식이 '기술개발=기술실용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기술개발의 목적이 경쟁력 향상과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하는데 있다면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활용(생산성 향상, 매출 및 소득 증대, 고용확충 등)되고 산업화되어 돈이 되는 농업을 만드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

DDA 협상의 마무리 준비

임 송 수 연구위원

지난 4월 인도에서 열린 주요 4개국(G4: 미국, EU, 브라질, 인도) 각료들은 6월 말까지 모델리티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DDA 협상을 종결한다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4월 30일에는 WTO 농업협상회의의 팔코너(Falconer) 의장이 주요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논의의 중심을 명시한 문서를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의 불씨를 당겼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으려고 치열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G4 각료회의가 5월에 이어 6월 초에도 열려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수시로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서 다루고 있다.

민감품목수는 4~5%선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된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먼저 국내보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개도수출국 모임인 G20은 미국이 무역왜곡보조를 22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U와 수입국 모임인 G10도 미국이 50~70억 달러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자국 농산물의 시장접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농업보조 양보란 없다는 게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이다. 현재 사용하는 보조보다 더 큰 규모를 제안한 미국의 속셈은 지금의 호의적인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음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시장접근에서는 미국의 공세에 EU, G10, 개도국 모임인 G33 등이 방어하는 형국이다. 팔코너 의장은 관세가 가장 높은 품목을 최대 85% 감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G20이 제안한 75% 감축률에 대한 지지가 높다. EU는 평균 관세 감축률

로 51%를 제안하였으나 미국과 G20은 54%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도국 특별품목이 관건

관세를 덜 감축하는 민감품목의 비율은 전체 농산물의 4~5% 선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속한 G10이 제안한 수준보다 2/3가량 줄어든 것이다. 민감품목에는 쿼터(TRQ)가 배정되는데, 그 방법에 이견이 많다. 수출국들은 국내소비량 대비 6%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국들은 수입량 기준을 선호하지만, 무슨 기준을 채택하든 쿼터는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쿼터배정 방법보다는 최종 쿼터 수준에 맞춘 타협(reverse engineering)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이 주장하는 특별품목이 최대 협상 난제로 꼽힌다. G33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이 식량안보, 농촌개발,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농산물의 20%는 관세 감축 예외 또는 최소한의 시장접근만을 허용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등 주요 수출국들은 소수 품목에 대한 예외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최근에 농산물의 7~8%가 특별품목 수로 제시되었으나, 양측 다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별품목에도 관세감축이나 쿼터(TRQ)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미국에 특별품목은 무역자유화의 허점으로 비치는 반면에 G33 측면에서 특별품목은 농업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정당한 요구이자 개발라운드의 목적에 들어맞는 수단으로 주장되는 것이다. 결국, 특별품목은 농산물의 20%보다 낮은 선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도록 타협될지는 모르


겠으나, 이는 협상의 성사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수출경쟁에서는 DDA의 중대한 성과로 간주하는, 2013년까지 모든 수출보조를 없애기로 한 것 외에도 수출신용과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180일 이상 장기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와 호주 등의 국영기업(STE)이 가지는 수출독점권의 규율 강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협상 마무리 준비를 위한 안전벨트

2001년 출범 이래 5년 넘게 떠돈 DDA 협상이 이제 착륙지점을 찾고 있다. 어쩌면 이미 착륙지점 주위를 뱅뱅 돌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DDA가 착륙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안전벨트는 무엇인가?

먼저 관세 상한이 배제되어야 한다. 매우 어려운 게임이지만 민감품목만이라도 관세 상한 예외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수의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확보도 관건이다. 또한, 그린박스의 유지는 직불 중심의 소득보전 정책 등 점진적인 농정개혁에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개도국 지위가 중요하다. 물론 선진 개도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의무를 담당하게 이행할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LDC)에 부여한 특혜 수입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다.

7월 말에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모델리티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DDA 협상은 2010년 후로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인도의 대선이 2008년과 2009년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6~7월의 더운 날씨만큼 DDA 협상의 열기도 후끈할 것이다. 우선순위에 근거한 실익 위주의 협상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을 때이다. 

일본, 대중국 쌀 수출 재개

김 태 곤 연구위원

일본이 드디어 대중국 쌀 수출 길을 열었다. 2003년 2월 이후 일본산 쌀은 검역상의 이유로 중국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양국 정부는 수출해금에 정식으로 합의, 빠르면 7월부터 조생종 쌀의 수출재개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에 합의된 수출조건은 일본 농림성이 지정하고 중국측이 인가한 시설에서 도정할 것, 수출전 훈증처리할 것, 이러한 내용을 기술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할 것, 포장에 품종·도정공장·수출자 명칭 및 주소를 중국어로 표기할 것 등이다.

일본식품 붐과 아시아 경제성장이 수출증가 배경

최근 세계적으로 일본식품 붐이 확산되고 아시아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고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은 농산물 수출에 적극적이다. 수출 목표액은 2004년을 기준으로 2009년까지 2배 증가한 6,000억 엔, 그리고 2013년까지는 1조 엔이다. 기본적으로 아시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본의 식민화를 보급하면서 전략품목에 대해 판촉지원을 하고, 동시에 수출국별로 수출저해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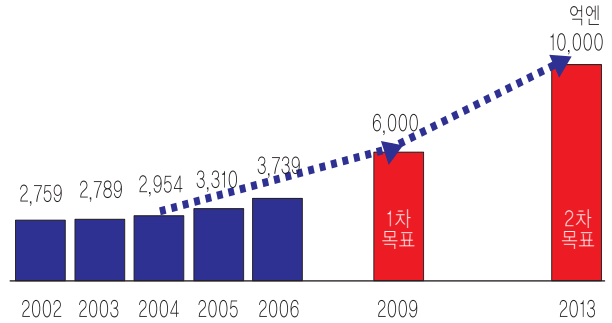
쌀 수출에 대해서는, 1999년 관세화를 단행한 후 수입방어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우오누마(魚沼) 고시히카리와 같은 고급브랜드를 수출해 왔다. 상업용 수출이 2002년 539톤으로 시작해 2003년 391톤, 2004년 469톤, 2005년 760톤, 그리고 2006년은 967톤에 달한다. 주요 수출국은 대만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포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하다.

대중국 수출해금을 계기로 쌀은 대만,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을, 가공해반은 미국과 캐나다를 중점국으로 지정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공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대중 쌀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산지나 업자의 신청에 따라 도정공장을 추가로 지정한 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수출해금 이벤트를 개최하여 판매개시를 알리고, 마케팅 조사와 소매점에서의 소개, 음식점과의 계약, 쌀 요리교실 개최 등을 통해 판촉 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판촉을 위한 기존의 역할을 보면, JA전중(농협중앙회)과 농림성이 역할분담을 하되, JA전중은 해외 마케팅조사와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성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상대국의 제도적인 수출장애요인을 개선한다든가,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상기국가 외에 한국, 영국, 독일 등도 포함하여 식품별 수입관련 규칙이나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수출국별로 수출매뉴얼을 작성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농산물수출 실적 및 목표액



자료 : 일본 농림성

구체적인 활동은 검역협상에 의한 검역문제 해결, 수출증명서 발행체제 정비, 가공시설에 대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 생산단계에서의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 신속한 유기농산물 검사 등이다. 그리고 최근 FTA 협상을 통하여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관세철폐 등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쌀 수출을 계기로 다양한 품목의 수출기회 확보

수출사례를 보자. 시마네현(島根縣)의 니시이와미농협은 2003년부터 대만에 쌀 수출을 시작하여 2006년 7,000kg까지 늘어났다. 생산자는 현의 인정농가이며, 저투입 쌀을 안전성과 맛으로 차별화하여 소량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시마네현이 전략품목으로 선정한 쌀에 대해 당시 대만 수입업자는 비싸기 때문에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이틀만에 매진되었다. 부가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화를 위하여 고급백화점에서 시식과 선전을 계속하고 중국어 포장을 사용하였다. 농협지정 도정공장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양판점에서 2개월 이내에 팔릴 수 있는 양을 소포장하여 수출하는 유통전략이 주효하였다.

쌀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식부면적과 참가 생산자도 늘어났다. 또 쌀 수출을 계기로 멜론이나 감 등 다른 작물의 수출 길도 확립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은 농업인이나 식품업자에게 새로운 수요개척이며, 이것은 생산품목 개편이나 생산확대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농가나 기업의 소득 증대와 경영의식 개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내 생산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의 고소득층이 일본 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일본의 쌀 수출확대가 농업에 어떠한 효과를 끼칠지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이다.

한·EU FTA 1차 협상의 동향과 쟁점

한·EU FTA 지리적 표시제, 축산, 주류가 주요 쟁점

서울에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한·유럽연합(EU) FTA 1차 협상은 한·미 FTA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1차 협상의 주요 합의 사항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품목 수 및 금액 기준으로 10년 내에 최소 95% 이상 철폐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들 수 있다. 분야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되 철폐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EU가 전통적으로 농업의 다원성을 중시해 상대국의 민감품목을 인정해 주는 통상 정책을 사용해 온 점과 관련이 있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의 주요쟁점은 지리적 표시제, 축산, 주류, 가공농산물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2007년 1월 기준으로 722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적용하고 있고, 주류를 포함할 경우 적용 품목 수는 약 5,000개에 이른다. EU가 과거 칠레나 멕시코 등과의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즈와 포도주를 개방 예외 품목으로 한 점 등을 볼 때 지리적 표시제를 비관세 보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육류나 낙농제품 등이 브랜드 명칭을 변경해야 하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U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주류 등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미국과 경쟁하는 품목이 적어 우리나라 농축산업 부문은 추가적인 피해를 받게 되어 이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2차 협상은 오는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리수매제 2012년까지 폐지

‘보리수급 안정대책’ 및 ‘보리 정부매입가격 결정안’이 5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보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보리 재고의 절반을 가축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기로 발표하였다. 또한 보리 수매가를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2~6%씩 인하하고 2012년부터는 수매제를 폐지하여 보리의 수급을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다.

보리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70년 37.3kg에서 2006년 1.2kg으로 30배 이상 감소한 반면 보리 생산량은 같은 기간동안 1,820천톤에서 208천톤으로 9배 정도만 줄어 매년 재고가 증가하였다. 2006년 12월 농협 창고 보리 재고량은 22만 4,000톤이다.

정부는 기계장비와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총체보리 재배를 지원하여 보리 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의 대상 작물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수매제 폐지로 인한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 감소 문제, 장기적으로 국산 밀처럼 보리산업의 쇠퇴가 우려된다. 총체보리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 총체보리 공급 증가로 계약생산단가가 떨어지는 등 총체보리재배에 의한 소득보전효과가 불확실하고, 경관작물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어 어느 정도 소득보전효과가 있을 지 미지수이다. 또한 총체보리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들이 보리 대신 양파·배추 등 동계작물 재배할 경우 이들 작물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 연쇄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 보전, 대체작목 발굴, 총체보리 조사료 공급 시스템 체계화, 직접지불제도, 보리 가공식품 및 소비처 발굴 등 보리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결혼 농업인가정 관심과 지원 필요

농림업에 종사하면서 결혼하는 남성 수는 2006년에 약 8,600명이며 그 중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여성과 결혼한 농업인은 3,500여 명으로 41%에 이르며 수와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농촌부터 다민족사회가 형성되어 향후 사회적, 문화적인 동질성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가정 중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농촌의 사회적, 물적 시스템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하다. 농촌지역의 외국인학교 등 교육시설과 탁아시설 등이 부족하고, 현재 국제결혼 가정 아이들의 85%가 초등학교생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사회적응 문제가 커질 것이다.

국제결혼 농업인가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아주 빈약하다. 2006년 기준으로 지자체 여성농업인 센터가 37개소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시설비용 부담으로 부진하다. 여성부로 갔던 여성농업인센터를 농림부로 환원하는 것이 논의중에 있다.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위한 언어, 사회, 문화 교육 등 교육을 실시할 여건도 열악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장려제도와 같은 지원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어렵다. 심지어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농업생산, 농촌가정생활 등에 적응하기 어려워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결혼 외국인여성들의 농촌사회 적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언어문제를 비롯해 사회, 문화, 가정, 영농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가정을 위한 도우미제도, 초등학교 교육, 탁아시설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 대책 모색”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5월 29일 마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5월 29일 마사회 대강당에서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4백여 명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우리 농업이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또 한 차례의 시련을 맞게 되었다”고 말하며, “농업 부문 보완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 발제는 우리 연구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농업구조변화의 전망과 정책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변화될 중장기적 모습을 전망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농림부 박현출 농정국장이 ‘한·미 FTA 보완대책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일정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또한 “농업을 지탱할 70세 미만의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가운데 희망자에게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 직불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간접, 단기적 대책으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가 마련되며 직불금은 단순가격이 아닌 조수익을 기준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가 완전 폐업을 원하면 5년 동안 폐원지원금을 지원하나 보상 수준과 조건은 한·칠레 FTA 때보다 까다로워진다.

이어 최정섭 원장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어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김종기 중앙대 교수,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박종수 충남대 교수, 양민용 제주감귤농가, 윤원근 협성대 교수, 윤익로 과수연합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지정토론과 청중토론이 있었다.

토론은 이날 발표된 한·미 FTA 보완 대책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며 향후 보완대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주군수와 군의원 내원, 협력방안 논의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의 이창우 군수와 군의원 8명이 5월 28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소회의실에서 최정섭 원장과 면담했다.

이창우 성주군수는 성주참외 생산 및 유통현황에 대하여 설명한 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성주참외의 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했다. 이 군수와 의원들은 연구원이 참외의 간접 피해에 대한 분석과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성주군 지역개발 연구 등 성주군과 연구원 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아태지역 농촌개발 컨퍼런스 개최

연구원은 강원대와 공동으로 5월 16일과 17일 춘천 라레나 리조트와 강원대에서 ‘아태지역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개발원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첫날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최정섭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농촌개발분야의 상

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날은 ‘한국의 농림축산업의 국제협력’, ‘일본의 동남아 농촌개발 협력경험 및 추진’, ‘한국농업의 국제협력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둘째날 오전엔 강원대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분과로 나눠 ODA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례발표와 토론을 한 뒤 오후에는 ‘개방화 시대 동북아 육우산업 분야 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원장 訪日, 연구협력 협의



최정섭 원장은 5월 22일 출국, 일본의 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서 ‘한국의 FTA 추진과 농업정책’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상호연구 교류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그리고 일본의 마을영농 운영지역과 농촌민박 사례 지역을 돌아본 뒤 5월 26일 귀국했다.

▣ 연구진 대외활동

△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5월 17일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아태지역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컨퍼런스에서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김병률 연구위원은 5월 7일 경기도 진흥원에서 ‘한·미 FTA와 우리 농업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 김창길 연구위원은 5월 29일 한국농촌공사 강당에서 열린 친환경/GAP 인증제도 워크숍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5월 21일 경북북부 지역혁신연구원이 영주시청 강당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FTA 이후 과수산업 전망과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박기환 부연구위원은 5월 23일 aT유통교육원에서 aT유통교육원 농산물산지유통인반을 대상으로 ‘채소류 수급동향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조정출 연구원은 5월 12일 열린 한국소비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다국적 소매유통업체의 한국시장 철수 원인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